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검역과 귀환*

최민경**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해항검역과 일본인의 경계 |
| II. 선행연구 검토 | 1. 해항검역의 개요 |
| III. 제국의 붕괴와 귀환 | 2. 해항검역 속의 포섭과 배제 |
| 1. 재외일본인의 귀환 | V. 결론 |
| 2. 재일외국인의 귀환 | |

Key Words : 帰還(repatriation), 海港検疫(maritime quarantine), コレラ(cholera), 戦後日本(postwar Japan), 日本人の境界(boundary of Japanese)

I. 서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은 제국 일본의 세력권이었던 지역 내부에서 다방향의 인구이동을 야기했다.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출신지를 향해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러한 귀환(帰還)¹⁾의 움직임은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역사사회학, 일본지역학 전공.

1) 누군가를 출신지(국)로 돌려보내는 행위를 뜻하는 repatri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이산(離散)했던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가 해방 직후 한반도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일본에서는 repatriation에 대응하여 인양(引揚/ひきあげ/히키아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제국 일본의 세력권 내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며, 군인·군무원의 인양의 경우, 복원(復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

단순한 인구이동이 아니라 제국 일본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 지역이 재편되고 신질서가 성립되는 과정과 깊게 관련된 것이었다.²⁾ 일본은 제국에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축소’되었고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는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중국대륙과 대만 또한 주도권을 두고 내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처럼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은 동아시아지역에서 1940년대 후반 새롭게 국민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의 경계를 재규정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의미도 지녔다.

그리고 1940년대 후반 동아시아지역에서 귀환 흐름의 중심은 일본이었다. 군인·군무원과 민간인을 합친 재외(在外)일본인 약 625만 명이 일본으로 돌아왔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조선인, 대만인 등 ‘외국인’, 약 170만 명이 모국으로 돌아갔다. 즉, 제국 일본의 패망에 따라 일어난 인구이동의 흐름 중 90퍼센트 이상이 일본을 매개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그만큼 귀환은 전후(戰後) 일본의 구성원을 경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귀환은 국민국가로 재탄생한 전후 일본이 포섭해야 할 대상과 배제해야 할 대상을 각각 영토 안과 밖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귀환이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본인의 경계를 규정하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하여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海港)검역에 주목한다. 기본적으로 검역은 국제적인 이동의 자유와 국민국가 영토 내부의 건강 유지를 조정하기 위한 “공간적 예방” 조치로 “질병이 발생한 장소를 특정하여 그 장소 또는 그 장소에서 이동해 온 것에 대한 장벽을 만듦으로써 장벽 내부에서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³⁾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해항검역은 인구이동과 무역활동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던 20세기 전반까지의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해항검역은 “전염병 유행지와 경유지의 선박들을 집중 검역함으로써 전염

를 제외하고는 귀환이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2) 蘭信三(2019) 「引揚・追放・残留の国際比較・関係史に向けて」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8.

3) 永田尚見(2002) 「国際検疫制度の文化的成立—人々の健康と国際移動」 『国際政治』 192, pp.156-157

병의 유입을 우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제1차 방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질병, 많은 경우, 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만드는 논리와 과정이 결코 과학적 지식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미에서 정치성을 띤다는 것이다. 즉, 검역은 국민국가가 영토 내부에 머물러도 되는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이며 검역의 기준과 방법은 국민국가가 구성원의 경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 논리를 반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 직후 일본은 귀환이라는 거대한 인구이동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렸으며, 이 흐름은 전후 일본이 일본인의 경계를 재규정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귀환항(歸還港)⁵⁾을 중심으로 한 해항검역은 이러한 재규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패전 직후 일본의 귀환항을 중심으로 해항검역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귀환, 검역 그리고 바다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교통의 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1차 세계화를 견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큰 규모의 상품, 사람의 국제이동이 시작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통의 발전에 힘입은 국제이동, 그중에서도 사람의 이동과 함께 질병의 이동 또한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염병인 콜레라는 과거 인도 북동부지역의 풍토병이었으나 영국의 식민지배에 수반된 인구이동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왔다. 1830년대 영국에 처음으로 등장한 콜레라는 이후 급속하게 발달하던 철도망을 타고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그리고 “교통혁명의 세계화는

4) 신규환(2020) 『海港検疫과 東아시아: 1919-20년 台灣과 朝鮮의 콜레라 防疫』 『中国史研究』 24, p.212.

5) 1945년 11월부터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정한 귀환 업무를 전담하는 항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글의 제3장 참조.

동시에 전염병의 세계화와 표리관계⁶⁾에 있었던 만큼 대륙과 대륙, 국가와 국가를 잇는 해륙(海陸) 교통망이 촘촘해 질수록 전염병 또한 빠르고 강하게 퍼져나갔다.

한편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은 이에 대한 대처 또한 국제적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합의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1851년 시작된 국제위생회의(International Sanitary Conference)로,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의하고 무엇보다 검역의 의미,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표준화를 추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검역의 국제적 협력 방안이 모색되는 과정을 이끈 것은 당시 국제무역을 주도하던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바다와의 관계 때문이다. 당시 전염병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주요 통로는 바다였다. 따라서 해항검역의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영국은 전염병의 원인을 도시의 불결함에서 찾는 장기설(瘴氣說)을 바탕으로 해항검역보다 도시 위생 강화를 주장했다. 이는 바다를 통하여 패권을 이룬 영국의 경우 해항검역 강화가 자국의 국제정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와의 관계는 근대 이후 각 국가가 검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대량의 상품과 사람이 바다를 통해 이동함에 따라 이와 함께 이동하는 전염병 또한 해항검역을 통해 막을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정치경제적으로 바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해항검역을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해항검역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넓은 의미의 자유 무역을 제한하게 되고 반대로 완화하면 바다를 통해 유입하는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해항검역의 논리, 방법, 정도에는 국가전략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더해 근대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일본에게 해항검역은 국가적 과제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근대 해항검역의 시작은 1879년 ‘해항 호열자병 전염 예방규칙(海港虎列刺病伝染予防規則)’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불평등조약 아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불평등

6) 이영석(2020) 「19세기 후반 전염병과 국제공조의 탄생」 『역사비평』 131, p.227.

조약 개정과 함께 기존의 각종 해항검역 관련 규칙들을 종합한 1899년 ‘해항검역법(海港檢疫法)’이 시행되면서 부터이다. 전전(戰前) 일본의 해항검역의 근간이 된 해항검역법은 총 15조로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검역을 의무화한 것으로, 검역이 이루어지는 항구와 대상 선박, 전염병은 내무대신(內務大臣)⁷⁾이 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제정 당시 해항검역법은 해외 항구에서 출발한 선박뿐만이 아니라 이미 식민지화 한 대만으로부터 입항한 선박도 동일하게 검역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일병합 등을 거치며 제국 일본의 세력권이 점차 커지고 세력권 내의 상품, 사람의 이동이 늘어나자 일본과 조선, 대만, 만주 사이의 해항검역은 실시하되 전염병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항외(港外) 정박 없이 입항 후 검역을 하고 선박 내 검사는 생략하여 간소하게 이루어졌다.⁸⁾ 즉, 전전(戰前) 일본의 해항검역은 제국으로서의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일본과 식민지의 경계는 포섭과 배제 사이에서 애매 모호한 것이었다.

그리고 물론 이와 같은 해항검역의 논리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하면서 실효성과 의미를 잃게 된다. 제국에서 하나의 국민국가로 ‘축소’된 일본은 새로운 해항검역의 방법과 의미를 모색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던 것이 귀환이라는 특수한 인구이동이었다.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패전 직후 재외일본인이 돌아오고 재일(在日) 외국인은 돌아가는 귀환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 일본을 둘러싼 귀환은 단시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가깝게는 동북아 멀게는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거의 모든 귀환자가 바다를 통해 이동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패전 직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은 전염병의 공포와 직면한 가운데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전쟁으로 악화된 일본 국내의 위생 및 영양 상태 속에서 특히 귀환선이 출발, 도착하는 귀환항은 전염병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공간이 되었고 그만큼 해항검역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7) 전전 일본의 행정기구인 내무성(內務省)의 장관. 지방행정·재정, 경찰,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8) 山下喜明(1968) 「日本檢疫史」 『日本医史学雑誌』 14-1, p.2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측면은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단순히 전염병의 유입, 확산을 저지하는 의미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패전 직후 일본의 해항검역은 일본으로 돌아오는 재외일본인과 일본을 떠나는 재일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용 과정은 이 두 집단의 경계를 새롭게 만들어 “누가 ‘일본’에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실천의 하나”이기도 했다.⁹⁾ 물론 국민국가로 ‘축소’한 일본이 포섭과 배제의 대상을 구분한 논리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기존연구가 존재한다.¹⁰⁾ 다만 귀환 및 해항검역과 연계하여 이러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거의 유일하게 들 수 있는 것이 아마모토 메유(山本めゆ)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¹¹⁾ 젠더(gender) 요인에 국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제국 일본의 패망 결과 나타난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의 흐름에 대해서 개괄하고 이 특수한 흐름에 직면하여 이루어진 일본의 해항검역 전개 과정을 전후 일본의 새로운 구성원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패전 직후 귀환을 둘러싼 해항검역의 실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전후 일본인의 경계가 재규정되는 가장 초기 국면을 구체적이고도 역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9) 山本めゆ(2019) 「性暴力被害者の帰還—『婦女子医療救護』と海港検疫のジェンダー化」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175

10) 대표적으로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오구마 에이지는 전전과 전후에 걸친 일본의 국민, 민족 인식을 역사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전 다민족 국가에서 전후 단일민족국가로의 변화를 관련 담론 및 정책 검토를 통해 그 특징과 원인 구조를 살펴보았으며,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小熊英二(1995) 『単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社; 小熊英二(1998) 『「日本人」の境界—沖縄・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 新曜社. 한편,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하여 이루어진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최은주의 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걸쳐 발간된 사진집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 (최은주(2014) 「전후일본의 전쟁을 둘러싼 ‘국민적 기억’: 1950년대말—60년의 역사 사진집에 주목하여」 『日本研究』 61, pp.137-155.)

11) 山本めゆ 前掲論文, pp.172-195.

III. 제국의 붕괴와 귀환

1. 재외일본인의 귀환

패전 직후 제국 일본 세력권 내의 일본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 통계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1940년대 초반 일본 본토의 인구통계 또한 교란이 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다양한 통계자료를 종합했을 때, 패전 직후 재외일본인의 수는 최소 660만 명 이상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 중 군인·군무원이 310만 명, 민간인이 350만 명 정도였다. 660만 재외일본인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만주, 대만, 중국대륙, 조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사할린, 인도차이나반도, 미크로네시아지역 등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중 만주, 대만, 조선의 경우 민간인의 비중이 높았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군인·군무원이 대부분이었다.¹²⁾

1945년 8월 중 일본이 내세운 재외일본인의 귀환 방침은 군인·군무원의 즉시 귀환과 민간인의 현지 정착이었다. 군인·군무원의 경우 포츠담선언에 명시된 무장해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민간인의 경우는 귀환선 부족, 일본 국내의 주택 및 식량사정 악화를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에 머무르도록 한 것이다. 패전 당시 재외일본인의 수는 일본 본토 인구의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규모였고 일본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가 돌아올 경우 일본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¹³⁾ 물론 이러한 방침을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재외일본인의 현지 체류 상황이 크게 나쁘지

12) 민간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는 일종의 식민지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동훈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각 지역 별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자성이 뚜렷했고(이동훈(2020) 『『재외일본인』사회의 형성과 연구 논점에 관한 시론(試論)』 『日本研究』 83, p.80), 이러한 독자성은 귀환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13) 加藤聖文(2012) 「大日本帝国の崩壊と残留日本人引揚問題—国際関係のなかの海外引揚」 増田弘編著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20-23.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만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1945년 9월부터 만주지역 치안과 체류 일본인의 상황이 매우 안 좋으므로 조속한 귀환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내 혼란을 이유로 대대적인 방침 전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귀환사업의 주도권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GHQ)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5년 10월 이후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재외일본인의 귀환을 위한 체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간인의 현지 정착이라는 방침을 고수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불안정한 중국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민간인 또한 조기 귀환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¹⁴⁾ 물론 이미 패전 직후부터 일본정부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선으로부터의 민간인 귀환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나, 연합국최고사령부가 귀환사업을 주도하면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민간인 귀환도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정부에게 귀환사업을 실제 운용할 책임 부처를 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후생성(厚生省)¹⁵⁾에 담당 부서를 설치,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되었다.

연합국최고사령부가 계획·관리, 후생성이 실행하는 체계가 갖춰진 후 가장 먼저 <표 1>과 같이 일본 전국에 10개 귀환항이 지정되었고 여기에 지방인양원호국(地方引揚援護局)(이 중 3개는 출장소)을 설치하였다.

<표 1> 1945년 11월 24일 지정된 귀환항

지방인양원호국			
우라가(浦賀)	마이즈루(舞鶴)	구레(呉)	시모노세키(下関)
하카타(博多)	사세보(佐世保)	가고시마(鹿児島)	
지방인양원호국 출장소			
요코하마(横浜)	센자키(仙崎)	모지(門司)	

14) 上掲論文, pp.32-39.

15) 1938년 내무성의 위생국과 사회국이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의료,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001년에 노동성(労働省)과 통합하여 오늘날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이른다.

재외일본인은 귀환항을 통해 귀환하기 시작했고 지방인양원호국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해방검역도 그중 하나이다. 이후 실제 귀환의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지방인양원호국이 설치되는 귀환항이 생기는 반면, 그 기능을 잃는 곳도 있었다.¹⁶⁾ 그리고 각 귀환항은 지리적, 기능적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일본인 귀환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일본인이 귀환한 하카타(博多)와 사세보(佐世保)는 둘 다 규슈(九州) 북서부지역에 위치하지만, 하카타는 지리적 가까운 조선으로부터의 귀환을 중심으로 운용된 반면, 사세보는 대규모 군항으로서의 특징을 살려 만주, 중국대륙 남부, 대만, 미크로네시아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부터의 귀환을 모두 담당하였다. 한편, 마이즈루(舞鶴) 등 동해와 면하고 위도가 높은 지역의 귀환항은 사할린으로부터의 일본인 귀환에 이용되었다.

그런데 재외일본인의 귀환에는 큰 물리적 장애물이 존재했다. 바로 귀환선의 부족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당초 재외일본인의 귀환에 일본 선박만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미국 선박의 공여라는 선택지도 있었으나 미군 병사들의 귀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되지 않았다.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재외일본인 중 민간인의 귀환에 대한 정확한 방침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선박으로 군인·군무원부터 귀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에 남아 있는 온전한 선박은 매우 적었고 결과적으로 귀환사업의 진행 속도 또한 지지부진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부터인데 미군 병사들의 귀환이 마무리되면서 선박 공여가 가능해져 재외일본인의 귀환에도 투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인·군무원, 민간인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재외일본인 모두 귀환하는 방향으로 기본방침이 굳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귀환자 수송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귀환한 재외일본인은 패전 후 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625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대부분은 1947년 이전에 돌아왔다. 전체 귀환자 중 만주 및 중국대륙에서 귀환한 비중이 44.7%에 이르고 그 다음을 조선 14.6%, 대만 7.6%가 잇는다.¹⁷⁾

16) 각 지방인양원호국의 연혁, 특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1997) 『援護50年史』ぎょうせい, pp.144-158.

17) 上掲書, pp.729-730.

2. 재일외국인의 귀환

제국 일본의 패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 건너와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에 의한 귀환 흐름도 만들어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편의상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며 일본 체류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재외일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5일 당시 일본에 체류하던 외국인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했을 때 약 230만 명 정도의 재일외국인이 있었다고 추측되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것은 조선인으로 약 200만 명이다. 조선인의 일본 유입은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1920년대까지는 돈벌이를 위한 노동이주,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강제동원에 의한 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다. 조선인 이외에는 식민지였던 대만 출신자가 비슷한 배경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었고 강제동원 된 중국인도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귀환 대상이었다. 한편, ‘류큐인(琉球人)’, 즉, 오키나와(沖縄) 출신자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귀환해야 했는데 이는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통치하게 된 결과였다.

약 230만 명의 재일외국인 중 귀환길에 오른 것은 약 74퍼센트에 해당하는 170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이 중 조선인의 귀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퍼센트를 넘어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 귀환 흐름의 중심을 이루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1945년 이전에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국 측은 재외일본인, 그 중에서도 군인·군무원의 귀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반면에 재일외국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본이 패전하였기 때문에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의 귀환과 잔류를 둘러싸고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¹⁸⁾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독자적인 지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가장 빠르게는

18) 일본 패전 직후 재일외국인의 귀환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희생된 것은 피식민자였던 재일외국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이다. 이 사건 자체와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김용안(2017) 『『계간 삼천리』 연구: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기사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72, pp.177-199.

1945년 9월 1일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는 귀환하고 일반 재일한인은 대기하라는 통달(通達)을 내렸다.¹⁹⁾ 이는 강제동원 노무자가 계속해서 체류하는 것과 많은 일반 조선인이 급속도로 귀환을 시도하는 것 모두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현실과 괴리된 것이었다. 재일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인은 강제동원 여부를 떠나 하루 빨리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45년 9월 중순 대한해협을 잇는 선박²⁰⁾이 운항을 재개하면서 이들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운항이 재개된 선박은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노무자의 귀환을 위한 것이었으나 일반 재일한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 항구로 몰려들었다. 물론 대부분은 연락선을 탈 수 없었고 ‘밀항’의 형태로 대한해협을 건너 귀환하는 조선인들이 속출했다. ‘밀항’을 통한 귀환자 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이후 재일외국인의 관련 통계가 정비되어 역산한 결과를 놓고 보면 적지 않은 규모였음은 확실하다.

한편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재일외국인의 귀환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지령을 내린 것은 1945년 11월이 되어서였다. ‘비(非)일본인의 일본으로부터의 귀환 (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이라는 제목의 이 지령은 재일외국인의 귀환을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 2>와 같이 4개의 항구를 지정하여 각각 특정 지역으로의 귀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²¹⁾ 가장 수가 많은 조선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이동 또한 규슈 북부지역, 간사이(關西)지역, 기타 지역으로 나뉜 순서를 통제하였고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편을 마련토록 하였다.

19) 厚生省勤労局長厚生省健民局長内務省管理局長(1945) 「朝鮮人集団移入労働者等ノ緊急措置ニ関スル件」 『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 pp.2-8.
 20) 전전 사용되던 부산-시모노세키(下関), 부산-하카타(博多) 항로를 사용하였다.
 21)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224: 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 1945/11/01’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_288 (검색일: 2021.01.19.)

<표 2> 재일외국인 대상 주요 귀환항

(1945년 11월 1일 지정)

항구	주요 귀환 대상
센자키(仙崎)	조선인
하카타(博多)	조선인, 중국인(북부지역 출신)
가고시마(鹿児島)	중국인(중부지역 출신)
구레(呉) (위 세 항의 보조항)	조선인, 중국인(북부 및 중부지역 출신)

이후 1945년 11월 말이 되면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외일본인의 귀환을 위한 귀환항 및 지방인양원호국 지정이 이뤄지고 재일외국인의 귀환도 이 체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표 2>의 4개 항이 여전히 재일외국인 귀환의 중심으로 기능하였고 이 외에 마이즈루로부터 조선 북부지역, 가고시마(鹿児島)로부터 오키나와로의 귀환도 이루어졌다. 재일외국인의 귀환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1945년 말까지 귀환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1946년 들어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에 잔류하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환 희망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1946년 3월 등록된 재일외국인의 수와 1947년 5월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령²²⁾을 시행하면서 집계한 재일외국인의 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1946년 3월 이전에 이미 대다수의 재일외국인이 귀환을 마쳤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공식적인 귀환 방침이 가동되기 전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많은 재일외국인이 모국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22) 1947년 5월 2일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 등록령에 따라 대만인(일부)과 조선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되었으며 1952년 4월 28일 외국인등록법이 시행될 때까지 재일외국인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외국인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식민지 출신자에 대한 통제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김광열(2006) 「1940년대 일본의 渡日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 김광열·박진우 외 『패전 전후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pp.53-56.)

IV. 해항검역과 일본인의 경계

1. 해항검역의 개요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해항검역에 관심을 보였다. 1945년 9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공중 위생 대책에 관한 건(Public Health Measures)’이라는 지령에서 전반적인 검역 강화와 더불어 미 해군과 협력하여 귀환 국면의 검역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그 결과 후생성 위생국 아래에 임시방역과가 설치되었다.²³⁾ 임시방역과는 기존에 군과 타 부처(운수성(運輸省²⁴⁾)) 소관이었던 검역 관련 시설과 인력을 이관 받거나 차용하여 해항검역에 임했으며 1945년 10월에는 임시방역국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최초로 해항검역만을 대상으로 한 지령을 내렸다. ‘귀환 시 상륙 및 항만 위생에 대한 의학, 위생학적 처치에 관한 건(Medical and Sanitary Procedures for Debarkation and Port Sanitation in Repatriation)’이라는 제목의 이 지령에서는 귀환항에서 전염병 및 이(lice) 보유 여부 검사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²⁵⁾ 이를 바탕으로 후생성은 ‘해항검역실시요강(海港検疫実施要項)’을 만들어 1945년 11월말부터 실제 귀환 업무를 실행하던 지방인양원호국에 하달했다.

이렇게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 체계를 갖추어 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해항검역보다 검역 대상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인 해항검역은 이른바 검역전염병(콜레라, 페스트, 천연두, 발진티푸스, 황열병)을 대상으로 하지만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는 이와 더불어 법정전염병

23)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248: Public Health Measures 1945/09/22’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110> (검색일: 2021.01.25.)

24) 1945년 설치되었다. 철도성이 전신이며 이 외에 체신성(逓信省), 내무성 등의 관련 업무를 일부 이관 받아 육해공 교통 행정을 담당하였다. 2001년 건설성(建設省) 등과 통합하여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되었다.

25)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167: Medical and Sanitary Procedures for Debarkation and Port Sanitation in Repatriation 1945/10/20’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231> (검색일: 2021.01.25.)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질,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일본뇌염) 뿐만 아니라 결핵, 한센병, 탄저병도 대상이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성병 등 ‘특수 질환’이 추가되었다. 그만큼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중요시되었고 전방위적으로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인양원호원(引揚援護院)²⁶⁾ 검역국이 출판한 『인양검역사(引揚檢疫史)』²⁷⁾의 서문을 보면 해항검역은 “국민 보건, 바꾸어 말하자면, 국민 생활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²⁸⁾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쟁으로 인해 주거,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태의 일본 국내에 전염병이 대유행 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을까. 우선 재외일본인이 귀환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귀환선이 일본에 입항하면 먼저 검역정박지에서 승선검역을 실시하였다. 승선검역에서는 선박보건상태신고서(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확인, 출발지의 전염병 유행 상황 청취, 전염병 환자·의심환자 유무 조사, 선내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입항시켜 승선자가 상륙하였다. 상륙한 승선자는 세관검사와 휴대품에 대한 DDT살포를 거친 후 검진소에서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하였다. 정밀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욕, 예방접종 후 검진을 마쳤다. 검진을 마친 귀환자는 수용소에서 1~2박 후 최종 목적지로 떠났다. 한편, 승선검역에서 전염병 환자·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병원선에 격리 수용되었으며 나머지 승선자도 잠복기 동안 해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재일외국인이 일본을 떠나 귀환하는 경우에는 승선 전 수용소에서 검사 후 전염병 환자·의심환자는 육상 격리시설에서 머물도록 하였으며 1946년 3월부터는 재외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DDT살포가 이루어졌다.

26) 1946년 3월 13일 후생성의 외청(外庁)으로 설치되었다. 기존의 지방인양원호국을 포함하고 후생성 내 귀환 업무 담당 부서를 합쳐서 만들어졌다. 1948년 5월 31일에 인양원호청으로 승격.

27) 총 3권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1947년 10월에 출판된 제1권을 참고한다(제2권은 1948년, 제3권은 1952년 출판).

28) 引揚援護院檢疫局(1947) 『引揚檢疫史 [第1卷]』, 引揚援護院檢疫局, p.0(はしがき).

그리고 『인양검역사』에 따르면 1946년 12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선박, 귀환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²⁹⁾

<표 3> 귀환항에서의 해항검역 대상 수
(1946년 12월 31일까지)

입항			출항		
귀환선		귀환자	귀환선		귀환자
3,619척	10,936,695톤	4,662,597명	1,068척	1,711,382톤	794,380명

이 통계에는 공식적인 귀환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귀환, 예를 들어 대한해협을 밀항하는 흐름은 포함되지 않으며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에 걸쳐 해항검역 체계가 확립되기 이전의 귀환 흐름 또한 누락되어 있다. 그 결과 특히 패전 직후부터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재일외국인의 경우, 전체 귀환자 수와 해항검역을 거친 귀환자 수에 차이가 크다.

해항검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전염병 환자를 가려내는 세균검사였다. 특히 콜레라를 대상으로 한 세균검사 수는 다른 전염병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으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³⁰⁾ 콜레라가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서 중심이 된 이유는 재외일본인의 귀환지 중 콜레라가 풍토병이거나 대규모 유행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항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가 쉬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콜레라의 경우, 천연두나 발진티푸스와 달리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국내에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귀환이라는 인구이동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인식이 다른 전염병보다 훨씬 강했고 결과적으로 귀환 국면 해항검역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이다. 실제 해상에서 대기하는 사례와 사망자 수, 백신 접종 건수도 콜레라가 가장 많았다.

29) 上掲書, p.2.

30) 上掲書, p.86.

2. 해항검역 속의 포섭과 배제: 콜레라검역을 중심으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전 직후 귀환 국면에서 일본의 해항검역은 콜레라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콜레라검역을 중심으로 해항검역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일본인의 경계 구성 과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서 특히 콜레라가 중요했던 시기는 1946년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이며 1947년 이후의 귀환에서도 간헐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유행은 없었다.

재외일본인과 재외외국인의 쌍방향적 귀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귀환항에 처음으로 콜레라 환자가 승선한 귀환선이 입항한 것은 1946년 4월 5일이었다. 이 귀환선은 3월 29일 중국을 출발하였는데 항해 중 콜레라가 발병, 전염되어 결과적으로 환자 21명(이 중, 3명은 사망), 의심환자 20명을 태운 상태로 우라가항(浦賀港)에 입항하였다. 1946년 봄은 재외일본인의 대규모 귀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로 이후에도 중국 광둥(廣東), 베트남 하이퐁(海防) 등에서 출발한 귀환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속출하였다. 첫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부터 2개월 동안 해상 격리된 선박은 20척이었으며 해상 격리 중 사망한 사람의 수는 141명에 다다랐다.³¹⁾

우라가항 다음으로 콜레라 환자를 태운 귀환선이 입항한 것은 사세보항이었다. 1946년 5월 4일 방콕을 출발하여 5월 17일 도착한 귀환선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인데, 이후 상하이(上海), 후루다오(葫蘆島), 인천, 부산에서 출발한 귀환선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고 해상 격리되는 선박과 귀환자는 크게 증가하여 한 때 약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상에 머물렀다.³²⁾ 하카타항은 우라가항 다음으로 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곳이었다. 첫 환자는 1946년 6월 3일 상하이로부터 귀환한 군인이 상륙 후 발병하였으며 1946년 10월 24일 입항한 귀환선에서 마지막 콜레라 환자가 확진될 때까지 29척의 귀환선에서 총 13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65명은 사망하였다.³³⁾

31) 上掲書, p.96.

32) 上掲書, p.103.

33) 上掲書, pp.100-101.

결과적으로 1946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귀환항 5곳, 즉, 우라가, 사세보, 하카타, 마이즈루, 센자키에서는 1,190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콜레라균 검사 건수는 230만 건 이상이었다.³⁴⁾ 특히, 상륙 후 발병을 하면 수용소에서의 밀집된 생활과 선박의 소독 지연으로 인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컸기 때문에 항해 중 상황을 파악하여 선내 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주력하였다. ‘콜레라항’으로 지정된 위 5곳의 귀환항에는 콜레라 대책본부가 마련되어 임시직원도 추가로 채용하였다. 의료진의 경우, 도쿄대(東京大), 교토대(京都大), 게이오(慶応大), 규슈대(九州大) 등 일본 유수의 대학과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와 수련의가 각 귀환항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에서는 콜레라 유입을 막기 위하여 패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되어 선제적으로 매우 많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일본 국내로의 콜레라 유입을 치열하게 경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귀환하는 재외일본인은 제국 패망 후 국민국가로 재구성되는 일본이 포섭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물론 패전 직후 일본정부는 국내사회의 혼란을 우려하여 재외일본인의 현지 정착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귀환사업의 주도권이 연합국최고사령부로 넘어가고 재외일본인의 전원 귀국으로 방침이 바뀌면서 재외일본인을 포함하여 새롭게 일본인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포섭할 재외일본인은 가능한 일본 국내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귀환할 필요가 있었고, 철저한 해항검역은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였다.

한편,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은 일본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항검역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귀환선 승선을 기다리며 머무르는 동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수용소 등을 포함하는 귀환항의 육상구역은 재외일본인의 경우 해상검역을 마치고 콜레라 비감염자만 거치게 된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의 경우 콜레라균 보유자라도 일단은 귀환항으로의 유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으면 재외일본인의 해상검역 결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둘째, 재일외국인이 승선하는

34) 上掲書, p.113.

귀환선이 다시 재외일본인을 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즉, 귀환선 자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세균검사가 필수 불가결했으며 이는 재외일본인이 귀환 항해 중 추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당초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항검역은 재외일본인의 귀환에 부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재일외국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에 의한 검역은 제한된 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포섭 대상인 재외일본인의 귀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46년 5월 7일 일본정부에게 내린 지령, ‘귀환(Repatriation)’ 속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을 떠나는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역 과정은 일부 생략 가능하다고 하였다.³⁵⁾ 그런데 일단 귀환한 재일외국인이 재도일(再渡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둘러싼 해항검역의 의미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재도일은 특히 조선인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해방된 한반도로 돌아간 재일조선인이 마주한 것은 사회 전반의 혼란과 생계의 어려움이었다. 물론 패전국 일본의 상황 또한 좋지 않았지만 과거 일본에서 일을 해 본 경험, 인적네트워크의 존재, 인접한 지리적 조건은 다시 한반도를 떠나는 결심을 하는데 충분한 배경이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1945년 말부터 이미 나타났고 초기에는 적극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1946년 봄 콜레라 확산 국면에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재일외국인, 특히 조선인, 대만인 등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졌고 이들의 일본국적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초 재도일을 규제할 근거는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 한반도 남부에서도 한인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더불어 콜레라가 유입, 크게 확산되면서³⁶⁾ 모국으로 귀환한 ‘비일본인’의 일본으로의 재입국은 돌연 금지되었다. 즉, 조선인의 재도일은 콜레라 확산과 더불어

35)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927: Repatriation 1946/05/07’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6009> (검색일: 2021.01.25.)

36) 한반도에서 콜레라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46년 5월 1일로 중국 광둥에서 재중환인을 싣고 부산에 온 귀환선에서였다. 이후 한 달 연 동안 300명에 육박하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고 사망률은 40% 이상이었다.

어 불법적인 ‘밀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합국최고사령부과 일본정부에게 밀항자는 콜레라균을 가지고 와 “일본 영토의 안전을 침범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강력한 단속 대상이 되었고³⁷⁾ 단속된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은 이들을 배제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³⁸⁾

흥미로운 사실은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을 귀환항에서 담당했다는 것으로 귀환항은 재외일본인의 귀환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외부의 불안전 요소들의 유입을 막고 돌려보내는 제방 역할”을 하였다.³⁹⁾ 이러한 귀환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인양검역사』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조선인 밀항자는 “무지자(無智者)가 많고 위생사상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검역규칙에 따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된다.⁴⁰⁾ 이들은 일본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간주되어 송환(送還)이라는 수단을 통해 물리적으로 배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처럼 콜레라를 중심으로 한 해항검역과 맞물려 이루어진 밀항자 단속, 송환 강화는 기존에 애매하게 남아있던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를 점차 명확하게 바꾸어 가는 과정 중 하나였다. 귀환항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항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쳐 재일외국인의 재도일이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외국인등록법⁴¹⁾을 거치며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출신자가 일본인의 경계 외부에 재배치되는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7) 조경희(2017) 「불안정한 영토 밖의 일상: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권혁태 · 이정은 · 조경희 엮음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한울아카데미, p.130.

38) 콜레라 검사 결과, 밀항자의 경우 재외일본인과 달리 증상이 발현된 환자보다 무증상 보건자가 더 많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콜레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증상 보건자를 포함하여 밀항자 중 콜레라 환자 발생 수가 집계, 활용되었다(引揚接護院檢疫局 前掲書, pp.109-110).

39) 조경희 앞의 논문, p.130.

40) 引揚接護院檢疫局 前掲書, p.105.

41)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에 맞춰 발효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등록령에서 ‘당분간’, ‘간주’되던 식민지 출신자의 외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확정되었다.

V. 나가며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일본은 다민족 제국에서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로 구성원의 경계에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귀환 국면에서 재외일본인의 포섭과 재일외국인의 배제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해항검역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재외일본인의 귀환은 전염병, 그 중에서도 콜레라 유입에 대한 강한 경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전후 일본사회가 포섭할, 해야만 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동원하여 일본 국내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부담을 주지도 않는 형태로 영토 내부에 들어오도록 했다. 반면, 재일외국인의 경우, 당초 재외일본인의 귀환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항검역이 이루어졌으나 조선인을 중심으로 재도일이 증가하면서 콜레라 유입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에 힘입어 철저한 배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밀항자에 대한 해항검역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던 식민지 출신자의 법적 지위를 일본인의 경계 밖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패전 직후 일본의 귀환향에서 이루어진 해항검역은 특히 제국에서 국민국가로의 구조적 재편 국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검역이 “새로운 국가가 혼돈, 타자성(otherness), 질병이라는 공포와 싸우기 위하여 사용한 가장 상징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⁴²⁾ 제국 일본에서 국민국가 일본으로 변화하는 시기는 검역이 지니는 정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귀환향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에서 이뤄진 검역은 ‘우리’의 포섭과 ‘그들’의 배제가 동시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했다. 본 연구는 각 귀환향이 지니는 특징, 콜레라 이외의 전염병에 대한 검역 과정 등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의 전체상을 보다 뚜렷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섬세한 분석들은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이와

42) Seidelman, R.D.(2012) Conflicts of Quarantine: The Case of Jewish Immigrants to the Jewish Sta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2), p.244.

더불어 귀환 국면의 해항검역 속 ‘사람’의 모습, 즉, 해항검역 종사자와 대상자에 대한 미시적 고찰 또한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참고문헌〉

- 김광열(2006) 「1940년대 일본의 渡日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 김광열·박진우 외 『패전 전후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pp.53-56.
- 김용안(2017) 『계간 삼천리』 연구: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기사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72, pp.177-199.
- 신규환(2020) 「海港検疫과 東아시아: 1919-20년 台灣과 朝鮮의 콜레라 防疫」 『中国史研究』 24, p.212.
- 이동훈(2020)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연구 논점에 관한 시론(試論)』 『日本研究』 83, pp.63-88.
- 이영석(2020) 「19세기 후반 전염병과 국제공조의 탄생」 『역사비평』 131, p.227.
- 조경희(2017) 「불안정한 영토 밖의 일상: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제주인들의 일본 밀항」 권혁태·이정은·조경희 엮음 『주권의 야만: 밀항, 수용소, 재일조선인』 한울아카데미, p.130.
- 최은주(2014) 「전후 일본의 전쟁을 둘러싼 ‘국민적 기억’: 1950년대 말-60년의 역사 사진집에 주목하여」 『日本研究』 61, pp.137-155.
- 蘭信三(2019) 「引揚・追放・残留の国際比較・関係史に向けて」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8.
- 小熊英二(1995) 『単一民族神話の起源—「日本人」の自画像の系譜』 新曜社.
- 小熊英二(1998) 『「日本人」の境界—沖縄・アイヌ・台湾・朝鮮植民地支配から復帰運動まで』 新曜社.
- 加藤聖文(2012) 「大日本帝国の崩壊と残留日本人引揚問題—国際関係のなかの海外引揚」 増田弘編著 『大日本帝国の崩壊と引揚・復員』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p.20-23, pp.32-39.
- 厚生省勤労局長 厚生省健民局長 内務省管理局长(1945) 「朝鮮人集団移入労働者等ノ緊急措置ニ関スル件」 『内鮮関係通牒書類編冊』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所蔵), pp.2-8.
-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48: Public Health Measures 1945/09/22’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110> (검색일: 2021.01.25.).
-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167: Medical and Sanitary

- Procedures for Debarkation and Port Sanitation in Repatriation 1945/10/20'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231> (검색일: 2021.01.25.).
-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224: Repatriation of Non-Japanese from Japan 1945/11/01'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5288> (검색일: 2021.01.19.).
-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2015) 'SCAPIN-927: Repatriation 1946/05/07' <https://dl.ndl.go.jp/info:ndljp/pid/9886009> (검색일: 2021.01.25.).
- 厚生省社会・援護局援護50年史編集委員会(1997) 『援護50年史』 ぎょうせい, pp.144-158, pp.729-730.
- 永田尚見(2002) 「国際検疫制度の文化的成立—一人々の健康と国際移動」 『国際政治』 192, pp.156-157.
- 引揚援護院検疫局(1947) 『引揚検疫史[第1巻]』, 引揚援護院検疫局, p.0(はしがき), p.2, p.86, p.96, pp.100-101, p.103, p.105, pp.109-110, p.113.
- 山下喜明(1968) 「日本検疫史」 『日本医史学雑誌』 14-1, p.29.
- 山本めゆ(2019) 「性暴力被害者の帰還—『婦女子医療救護』と海港検疫のジェンダー化」 蘭信三・川喜田敦子・松浦雄介編 『引揚・追放・残留—戦後国際民族移動の比較研究』 名古屋大学出版会, pp.172-195.
- Seidelman, R.D.(2012) Conflicts of Quarantine: The Case of Jewish Immigrants to the Jewish Stat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2), p.244.

■ 접수일: 2021년 2월 22일
심사완료: 2021년 3월 7일
게재확정: 2021년 3월 16일

<要旨>

敗戦直後日本における海港検疫と帰還

崔 璿 耿

本研究では、これまであまり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海港検疫を通じて、敗戦直後の帰還(引揚)局面において、日本人の境界が新しく規定されていく過程を考察した。1945年8月15日、帝国の崩壊とともに、日本は多民族帝国から単一民族で構成される国民国家へと構成員の境界に急激な変化を経験せざるを得なかった。こうした変化は帰還過程で在外日本人の包摂と在日外国人の排除といった形で表面化するが、その中心となった空間は帰還港だった。分析の結果、在外日本人の帰還は伝染病、そのなかでもコレラの流入に対する強い警戒の下、進められた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彼らはあくまで戦後日本の構成員として包摂の対象だったため、GHQ/SCAPと日本政府は多くの資源を動員し、日本国内を混乱させない形で領土の内部へ位置させた。一方で、在日外国人に対する海港検疫の場合、当初、彼らの存在が在外日本人の帰還過程へ障害物とならないことを目的に限定的に行われた。ところが、朝鮮人を中心に再渡日が増加するとともに、コレラの流入を防ぐという「科学的根拠」に裏付けを得て、徹底的な排除が始まった。そして、このように始まった帰還港を中心とした密航者に対する海港検疫は、曖昧な状態だった植民地出身者の法的地位を日本人の境界の外側に位置づける過程の始まりだった。本研究で検討した敗戦直後、日本の帰還港で行われた海港検疫は、特に帝国から国民国家への再編という構造的変化の局面に焦点をあてたという側面から、検疫のもつ政治性を明らかに伺える事例の一つとして意味をもつ。

<Abstract>

Maritime Quarantine and Repatriation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of Japan

Choi Minkyung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by which the boundaries of Japanese were newly defined in the repatriation phase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of Japan through the maritime quarantin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so far. On August 15, 1945, with the collapse of the empire, Japan was forced to undergo a drastic change in the boundaries of its members from a multi-ethnic empire to a monoethnic nation-state. This change surfaced in the process of repatriation in the form of inclusion of Japanese overseas and exclusion of foreigners living in Japan, and the repatriation port was the center of this chan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overseas was carried out under strong cau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especially the influx of cholera. However, because they were the subject of inclusion, GHQ/SCAP and Japanese government mobilized many resources to place them inside the territory in a way that did not disrupt Japa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oreign residents in Japan, maritime quarantine was initially carried out in a limited manner with the aim that their existence w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repatriation process of Japanese overseas. However, as the number of returnees to Japan increased, especially among Koreans, the thorough exclusion began with the support of the 'scientific basis' to prevent the influx of cholera. And this maritime quarantine against stowaways centered on the repatriation ports was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of positioning colonials, whose the legal status was still vague,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Japanese. The maritime quarantine conducted at Japan's repatriation port immediately after the defeat examined in this study is one of the cases that clearly shows the political nature of quarantine by focusing on the structural change from the empire to the nation-state.